

여야, 탄소리...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산으로 가나

여 "언론개혁 이제부터 시작" 야 "3대 독소조항 걷어내야" 언론단체 불참에 전문가 손사래 협의체 구성 난항 가능성 우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가동 전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체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협의체에 속한 최형두 의원도 통화에서 "3대 조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질서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물러서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미지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의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법안 상정을 늦춘 '회군' 이후 강경 대오를 재정

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각계 인사들이 협의체 참여를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렇지 않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과 꾸준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尹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총공세... "검찰판 총풍"

"양아치...尹 대선행보 중단을" 국조·국감에 공수처 수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일제히 총공세를 폈다.

범여권 인사들은 이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벌어졌을 법한 '정치공작' 범죄로 규정,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내고 "의혹 제기만으로도 엄청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다.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친문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

이 밝혀지면 제2의 총풍사건, 검풍사건이 될 것"이라고 썼고, 김경협 의원은 "믿기지 않는다.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검찰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조기 사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 "윤석열 검찰, 총선을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라며 SNS에 글을 잇따라 올렸다.

대권주자들도 즉각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격적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일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겉으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검찰 전체를 본인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사정기관을 시장잡매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윤 전 총장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사건"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검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처럼회'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씨는 주제넘은 대선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개이트'는 가려질 수 없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비열하고 비겁한 놈. 양아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며 "부화뇌동한 검사와 정치인, 끝을 한번 보자"고 썼다. /연합뉴스

전남선관위, 내년 선거법 위반·명절 기부행위 단속 강화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2022년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계시하는 행위 ▲이름표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설치 및 배부 등은 금지된다.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광주·전남 8곳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중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

2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번엔 공모할 국회의원 선거구는 광주 2곳(서구, 북구), 전남 6곳(여수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나주시·화순군, 담양군·함평군·영암군·장성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

군)이다. 응모자격은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하며, 신규 입당자는 입당원서를 첨부해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이며, 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시·도당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으로 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동물 안락사 시 마취"...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 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p>1) 40평(전용) 2억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사무실 리모델링한,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	
010-6670-9800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